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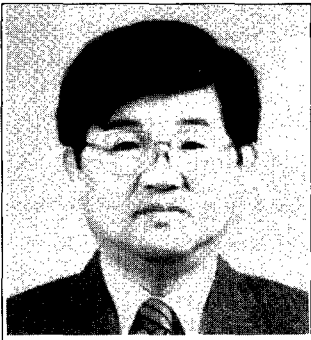


제77차 원자력계 월례 기술회의

북한핵과 경수로 지원

이 은 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핵문제가 대두되었을 때에도 핵개발에 대한 강한 의심과 심증은 있었지만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

북한에 핵이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미국 등 정보기관에서는 직접적인 접근보다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가능성이란 쉽게 얘기하면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기술을 몇 가지로 분석하여, 그 중에서도 핵심 기술들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북한이 핵을 보유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핵무기의 보유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핵물질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둘째, 만일 핵무기를 완성하였을 경우, 목적지까지 운반할 수 있는 운반수단이 있는가?

셋째, 기폭 장치를 개발할 기술을 확보하였는가?

마지막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볼 때, 그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 핵실험이 불가피할 것이다.

제한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핵실험을 자체 영토내에서 극비리에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 북한의 핵보유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자체의 보유 여부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핵개발에 관한 의지일 것이다.

북

한은 과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현재로는 아무도 정확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인공 위성을 통한 감시 자료와 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동구권 외교 소식통을 통한 정보를 종합하여 추정한 것이 모두이다.

핵개발은 단시간 내에 결코 이를 수 없으며, 막대한 예산과 연구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동안 역사적으로 드러난 몇 가지 사실들로부터 북한의 핵개발에 관한 의지를 분석하여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1.7.4 남북공동성명

72년 우리 나라는 남북간의 화해 무드로 모든 국민이 통일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밀명을 받고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북에서도 김일성 주석의 밀서가 전달되었다.

이런 비밀 접촉의 결과, 그 해 7월 4일에는 한국전 이후 처음으로 남북간의 평화 공동 선언이 채택되었다.

그 내용은 남북간의 화합을 골간으로 하여 인젠가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하여, 특히 북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들의 가슴을 들뜨게 하였다.

이런 화해 무드는 그 해 10월 유신으로 인해 상당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통일이라기보다는 정권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둔 합의가 아니었는가 하는 점이였다.

같은 해 11월 북한에서는 부수상이었던 박성철이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비하고 자주 독립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박성철은 이미 그 2년 전 8월에 북한이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게 핵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

2. 북한의 평화 위장

북한은 겉으로는 평화를 원하는 것처럼 은폐하면서 뒤로는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여 적화통일을 꿈꾸는 흑심을 보였으며, 이러한 야심은 그 후의 북한의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핵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과의 원자력협정에 힘을 쏟은 흔적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소련과 중국을 통해 핵기술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노출되었으며, 그 결과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명되었다.

반면, 북한은 꾸준히 핵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나타난다.

김일성 대학과 김책 공대에 핵관련 학과를 신설한 것과 영변 원자력 연구 단지를 확장하여 기술자들을 한 곳에 집중시켰으며,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이 지역을 '특별구'로 지정하여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 등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3. 아웅산 폭탄 테러

83년에는 우리 나라에서 잇을 수 없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9월 1일에 소련이 우리 민항기인 KAL 007기를 격추한 사실이며, 10월 9일에는 북한이 버마의 아

웅산 묘역에 폭탄 테러를 감행하여 우리 나라의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려는 기도였다.

어떤 이유에서든 소련이 만항기를 격추한 것은 국제적인 비난을 모면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었다.

승무원을 포함하여 269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을 바다에 수몰시킨 사건은 결국 소련에 큰 변혁을 가져오게 된 간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바로 두 달도 되지 않아 10월에 북한이 랑군에서 테러를 감행하여 공산권에 대한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킨 것이다.

소련으로서는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기도 어려운 판에 북한이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으니,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 시점에 개혁주의자인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소련에 거센 개방의 물결을 가져 왔으며,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조금한 개혁의 추진은 결국 소련 연방을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예상외로 빠른 붕괴가 도래하였다.

시기적으로 볼 때 소련의 경제 사정은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며, 당시 중국의 사정도 결코 북한을 돕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아웅산 테러를 일으켜 고립을 자초하였으니, 북한의 경제 사정은 이 사건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

당시 북한은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

하여 온 원자로 건설에 착수하였으며, 이로 인한 외부의 압력을 방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런 시점에 아용산 만행을 저질러 스스로 무덤을 판 격이 되었다.

다행히도 소련이 민항기 격추 사건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었으며, 페레스트로이카 운동으로 소련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하는 문제에 더 국제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므로, 상대적으로 북한의 만행이 주의를 덜 받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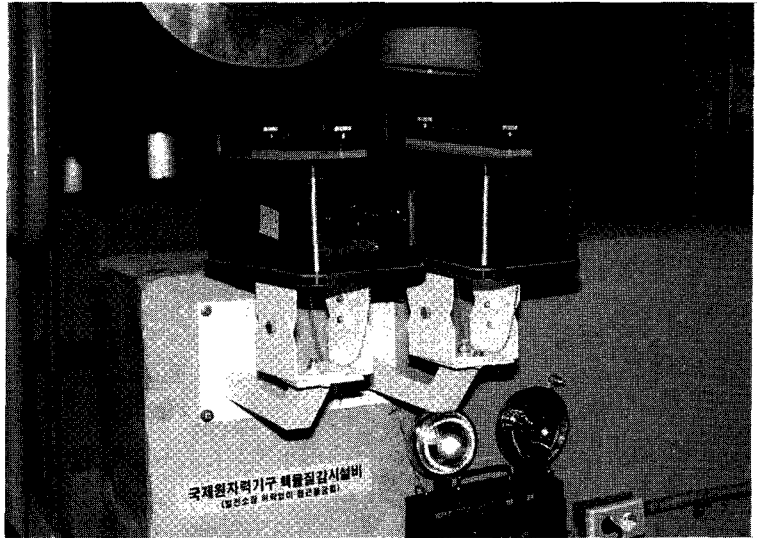
그러나 어찌됐건 북한의 행동은 거북스럽기만 하였다. 적어도 핵개발을 완성할 때까지는 세계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데, 경제난 때문에 소련에 손을 벌리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국이 도와주지도 않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궁지에 몰린 북한은 돌과구를 남한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한국전 이후 분단된 한반도에는 엄청난 수의 이산 가족들이 서로의 생사를 몰라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 북한은 이산 가족들의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적십자회담으로 대체하면서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모면하려고 하였다.

드디어 85년 9월에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이산 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으나, 정치적인 음모가 내재된 만남은 지속되기 어려웠다.

엄격한 통제와 선택된 일부 공산당



우리 나라 원전에 설치되어 있는 IAEA의 핵물질 감시설비

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을 뿐 순수한 가족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남북간의 예술단 공연은 정치 선전이라는 비방속에 결국 지속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렇지만 이를 계기로 남북한간에 다시 화해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남쪽 국민들에게 아용산 만행을 쉽게 잊게 했으며, 북한은 그들의 음흉한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도 북한은 그들의 속셈을 다 차리면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원자로의 개발 등 핵개발을 계속한 것이다.

북한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소련의 협조를 구하게 되었으며, 소련측으로부터 일부의 식량과 4기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지원을 약속받았다.

그 대가로 소련은 북한에게 「핵확

산 금지조약」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소련의 영향력을 재확인하였다.

드디어 85년 12월에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에 서명하게 되었다.

북한이 NPT에 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 북한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가장 말썽꾸러기인 북한이 서명함으로써 다른 적성국들의 서명을 유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으로서도 이 서명이 주는 의미가 컸다. 그것은 북한이 추진중이던 원자로의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었다.

이 서명으로 일단 북한의 핵개발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시켰으며, 국제적으로 의심을 받지 않으면서 원자

로 건설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생각한대로 잘 움직여주지는 않았다. NPT의 후속 조치인 「전면적 안전 조치 협정」에 서명하는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NPT의 규정에는 이 조약에 서명한 국가는 비준 후 18개월 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부적인 전면적 안전조치 협정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비록 NPT에 서명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핵설비를 검사할 수단이 없으면 핵확산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핵사찰이라는 강제적인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북한은 당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NPT에 서명은 하였지만, 시설을 다 공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특유의 외교적인 전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즉 안전 조치 협정의 문안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 형식이 맞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시간을 지연시켰다. 결국 정해진 기한내에 서명하지 않았다.

당시 IAEA의 사무총장인 한스 블릭스(Hans Blix)는 고르바초프에게 부탁하여 원자로의 건설 지원을 안전 조치 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보류할 것을 요청하였고, 자체 개혁에 막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있던 소련에게 명분을 제공하여 지원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이런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중이던 원자로를 완성하였으며, 87년 12월에는 운전을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상은 중단된 상태로 있었으며, 결국 북한은 원하는대로 시간을 벌며 핵무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시설을 완성한 셈이다.

4. 남북 고위급 회담

89년 4월 미국의 인공 위성이 북한 상공을 정찰하다가 영변 지역에 이상한 건물 두 채가 건설중인 것을 발견하였다.

영변 지역은 북한의 핵개발 기지로 알려져 있었으나, 건물의 형태나 위치 등을 보더라도 재처리공장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의 위성 사진에 의해서도 밝혀지게 되었고, 이 때부터 북한의 핵개발 의지가 강력하다는 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북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당시 소련은 이미 연방내의 국가들이 각각 독립하였고, 중국은 88년에 한국과 수교를 하여 북한은 고립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국제적인 압력에 견디기 어려웠던 북한은 돌파구를 남쪽과의 위장 대화에서 찾으려고 시도했다. 핵개발을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남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한 것이다.

북한은 당국의 고위급회담을 유도하여 양국 총리들이 서울과 평양을 서로 왕래하면서 1년여에 걸쳐 남북간의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은폐 전략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91년 초 남북간의 합의문이 작성된 후 북한의 태도는 급속하게 돌변하였다. 합의 사항이었던 남북 핵통제 공동위원회는 서명한 잉크가 미처 마르기 전에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공연한 업포를 할 정도로 핵개발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 시점이 북한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였으리라 본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마무리짓지 않고서 업포를 놓기에는 당시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남북간의 합의문은 간 곳이 없었고, 더 이상 북한의 거짓에 놀아나기에는 남한이나 미국도 지쳐있어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은 큰 소리를 치면서 남측과의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였으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성공리에 마친 결과일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5. 핵사찰

그러나 이런 북한의 행동은 결국 큰 실책이었다. 북한의 자신감에 당황한 미국이 고삐를 더욱 조였기 때문이다.

영변 핵시설의 폭격까지 고려하게



되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이 안전을 상정하여 경제 봉쇄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북한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였다.

결국 북한은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7년이나 끌어오던 「전면적 안전조치 협정」에 92년 5월에 서명하였고, IAEA의 감시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92년 5월 IAEA의 사찰단은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 북한이 공개한 핵시설들을 돌아 보았다.

북한은 임시 사찰 요구에 14개의 핵시설을 공개하였으며, 이 시설들은 운전중인 원자로와 건설중인 원자로 현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성 사진에 의해 노출된 두 개의 시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IAEA 측은 당연히 두 시설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북한측은 순수한 군사 시설이라고 고집하면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두 개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자 IAEA측은 특별 사찰을 요구하게 되었다.

북한은 처음 공개한 14개의 시설 중에 직접적으로 핵무기의 개발과 관련된 시설들이 없으니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고집하였다. 그러나 IAEA 측이 보기에는 북한의 거짓 행동이 너무 확연하게 보였다.

첫째, 북한의 원자로는 이미 5년이나 운전중이었다. 그렇다면 일부의 핵연료는 교체될 수 밖에 없었으며, 교체된 핵연료들은 어딘가에 보관되어



95년 3월 9일 한·미·일 3국 대표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KEDO 설립 협정문에 서명했다. 사진 좌로부터 당시 崔東鎮 경수로기획단장, 갈루치 미국 핵대사, 엔도 일본대사

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었다.

북한측은 그때까지 한번도 핵연료를 교체한 적이 없다고 우겼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일로, 북한 원자로는 우라늄의 0.7%만이 핵분열을 일으키는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이런 천연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자로는 가동중이다.

월성에 있는 중수형 원자로는 그것인데, 이 원자로에 한번 핵연료가 장전되면 오래 태워야 6개월 정도로 자주 핵연료를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운전하면서 핵연료를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5년 동안 이런 연료로 교체없이 운전하였다고 하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둘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접근한 방법은 플루토늄 폭탄으로 보인다.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처리시설이 필수적이다. 북한이 공개한 시설 중 일부는 바로 이런 재처리 기술을 터득하기 위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 북한이 재처리를 통하여 플루토늄을 확보하려면 보다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설비를 갖추려고 할 것이다. 위성 사진을 통해 의심이 가는 시설이 바로 이러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

두 개의 미신고 시설은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크다. 그 중 하나는 사용후 방출된 핵연료들을 보관하는 시설이며, 다른 하나는 재처리 설비로 보인다.

분명히 연소된 핵연료를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을텐데 찾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북한이 순순히 보관된 장소를 가르켜 줄 리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사찰을 요구한 것은, 의심은 가지만 공개되지 않은 두 개의 미신고 시설이었다.

북한은 특별 사찰 요구에 지나칠 정도로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처음에는 군사 시설이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로만 거부하다가, 점점 압력이 커지자 급기야는 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또 IAEA에서도 탈퇴하겠다고까지 강경하게 반발하였다.

NPT 규정에는 만일 이 조약에서 탈퇴하려면 미국·러시아·영국 등 핵보유 국가 중 한 나라에 그 의사를 표시하고, 의사가 접수된 후 3개월의 유보 기간을 두어 충분히 확인이 된 후에야 비로소 탈퇴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북한이 강력하게 탈퇴 의사를 미국에 전달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나, 미국과의 막후 협상을 통하여 득실을 계산한 결과, 탈퇴 확인 종료 시점 하루 전에 그 의사를 유보하기로 결정하여 결국 북한의 탈퇴 시위는 해프닝으로 끝난 셈이다.

북한의 행동을 보면 그들의 고민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그 시설들이 정말 외부에서 짐작하는 목적의 설비들이라면 당연히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시설들이 순수한 군사시설이라고 하여도 역시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재처리 시

설이 공개되면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 온 모든 행동이 거짓으로 드러난다.

핵개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던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면, 아마 북한으로 하여금 다른 모든 것을 공개케 하여 온 천하에 북한의 핵개발 상황을 적나라하게 들춰내려고 할 것이다.

만일 그 시설들이 재처리 관련 설비가 아니라면, 또는 아직도 건설중인 별개 아닌 설비라면 북한의 핵능력이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래서 북한은 특유의 반발로 외부를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과거핵 · 현재핵 · 미래핵

북한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우선 핵무기의 원료를 확보해야 한다.

핵무기의 원료로는 고농축의 우라늄을 사용하는 방법과 원자로에서 연소된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우라늄을 고도로 농축시키려면 필수적으로 농축 과정을 개발하여야 하고, 플루토늄을 얻으려면 재처리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북한이 추진하는 농축 방법은 레이저 분리법이 아니면 화학 처리법으로 짐작되며, 평산에 있다는 실험실 수준의 농축 설비로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에는 한계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추진하는 핵무기 개발 방향은 플루토늄을 원료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가능성은 위성 사진을 통해 밝혀진 것과 같이 북한이 대규모의 재처리 시설을 갖추려는 의도와도 일치한다.

북한은 이미 제2 원자로를 가동하여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하였으나, 아직까지 손에 넣지는 못한 상태이다. 플루토늄을 원료로 활용하려면 우선적으로 재처리 공정을 개발하여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을 추출해야 한다.

영변에 있는 북한의 재처리 시설은 89년초 이미 건설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미국의 인공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재처리 공장으로 파악되는 건물의 외부 구조물들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었으며, 최소한 6개월 이상 공사가 진척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각종 정보를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북한에서 이 시설이 가동되지는 않았다고 보이며, 91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국제적인 압력이 가중되어 완공이 지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북한의 원자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었겠는가하는 문제를 검토하려면 핵연료봉을 연소시킬 원자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를 보아야 한다. 또한 그 원자로가 플루토늄 생산에 적



李宗勳 한국전력공사 사장(왼쪽)과 스티븐 보스워스 KEDO 사무총장이 96년 3월 20일 미국 뉴욕에서 대북한 경수로 건설지원사업의 주계약자로 한국전력공사를 공식 지정하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합한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북한이 자체 개발했다는 원자로는 공기 냉각의 흑연 감속재를 사용하는 원자로로 알려져 있다. 이런 형태의 원자로는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초기에 많이 개발한 형태로 지금은 중단된 원자로형이다.

북한 원자로의 특성을 살펴보면, 56년 프랑스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하다가 중단한 G-1형과 유사하다.

프랑스는 초기에 이 원자로로부터 플루토늄을 생산하려고 계획하였다가 중단하였다. 북한이 이 형태의 원자로를 계획한 것은 70년대말 또는 80년 초로 추정된다.

2. 제2 원자로 건설 추진

80년 7월 북한은 열출력 30MW 규모의 제2 원자로를 자체 설계하여 건설하기 시작하였으며, 87년 12월에 가동하였다.

이 원자로를 최대 출력으로 운전할 경우 약 11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그동안 8 내지 12 MW에서 운전하였으므로 대략 1년 동안에 5~6kg 정도의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2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하고, 그라파이트를 감속 물질로, 냉각은 탄산 가스로 하는 원자로로서, G-1형과는 공기를 냉각재로 사용한 점이 다르다.

프랑스에서 계획을 중단한 이유는 플루토늄 생산이 주 목적이므로 경제

성이 없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굳이 이 원자로를 선택한 이유는 옛 소련이나 중국의 도움을 적게 받으면서 천연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원자로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플루토늄 전환율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그 당시 북한이 농축 기술이나 중수 생산 기술을 미처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핵연료봉 교체 여부

북한은 94년 5월 운전중이던 원자로에서 처음으로 핵연료봉을 교체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 원자로에서 꺼낸 핵연료봉의 샘플을 추출하여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연소시킨 것인지 알아 보려

고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왜 북한이 이런 간단한 요구를 극구 부정하였으며, 왜 IAEA는 북한측이 싫다는데도 강력하게 샘플 채취를 요구하였을까?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는 천연 우라늄을 원료로 하고 있다. 이런 연료로는 핵분열 물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주 연료봉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이런 연료로 87년 12월부터 94년 5월까지 무려 6년 6개월이나 태울 수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

4. 핵연료 교체 여부 논란

얼마 동안 핵연료를 태우건 그 까짓게 무슨 문제인가?

왜 IAEA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실은 이 점이 북한의 핵원료 확보를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핵분열 물질은 연소되면서 소멸된다. 그러나 핵분열 반응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우라늄 238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비록 소량이지만 인공 원소이면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플루토늄의 순도를 높여 핵무기를 만들려면 짧은 기간 동안만 연소시켜야 한다.

오래 태우면 핵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짝수 질량의 동위원소들이 생성되어 폭탄으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연소 기간을 짧게 하면서 자주 핵연료를 교체하여야 한다. 그러면 90% 이상의 순수한 핵물질을 만들 수 있다.

IAEA가 핵연료봉의 교체 기간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즉 만일 북한이 정말로 핵연료봉을 7년 가깝게 교체하지 않았다면 교체된 핵연료봉 안에 들어 있는 플루토늄은 순도가 나빠 핵무기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동안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핵연료봉을 교체하였다면 얼마나 자주 교체하였는가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핵무기의 원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양과 그 순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북한은 핵연료봉의 샘

플 테스트를 거부하고 있으며,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핵무기의 원료 확보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5. 과거핵

북한이 너무 강력하게 샘플 테스트를 거부하기 때문에 더욱 의심스럽다.

그러나 비록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북한이 플루토늄을 보유할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

즉 플루토늄 순도가 90% 이상될 수 있는 연소 기간을 이론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교체 기간으로 보고 그 동안 몇 번이나 교체가 가능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추정은 북한이 최적으로 가장 많은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이며, 또 그렇게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100% 회수하였다는 가정으로 지금까지 얻어낸 양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양을 보면 94년 5월 교체시까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플루토늄은 약 40kg이다.

히로시마에 떨어트린 핵폭탄에 사용된 플루토늄 양이 약 10kg이므로 북한은 4개 정도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은 너무 이상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이 양의 60% 정도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핵연료봉을 교체하는 데 매번 약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플루토늄이 핵연료봉 내에 생성되

는 형태를 보면 극히 적은 양이 모든 위치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기술 선진국도 실제 회수율은 80%를 넘지 못한다.

설사 북한이 미국 수준으로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재처리 시험에 상당한 양이 소모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실제 북한이 그동안 여러 번 핵연료봉을 교체했다손 치더라도 지금까지 얻은 플루토늄은 결코 많은 양은 아닐 것으로 본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소위 '과거핵'으로 불리는 이미 교체된 핵연료봉에서 확보한 플루토늄은 무시하여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미국의 추정에 오차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실제 북한이 몰래 핵연료봉을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핵사찰이 시작된 92년 5월 이후에는 너무 감시하는 눈이 많아 실제 교체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교체 가능 기간은 실제로 87년 12월부터 92년 5월 사이에 이루어진 양만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추정량이 더욱 줄어들며, 바로 이 점이 미국과 북한간의 핵협상을 마음놓고 시작하게 된 동기로 볼 수 있다.

즉 북한과 '과거핵' 문제로 승강이를 하느니, 과거핵은 무시하고 더 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현재핵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려면 어떤 식으로건 핵무기의 원료 물질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국제적으로 플루토늄은 공식적인 매매가 되지 않는다. 이런 핵물질은 국제간의 협약에 의해 자국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을 항상 IAEA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사용되는 용도와 소모된 양도 핵사찰을 통하여 감시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에게 판매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 입장으로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는 원천적으로 핵물질의 생산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 의지를 포기하게 하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과거 핵은 미국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일단 덮어둔다고 하더라도, 94년에 교체한 핵연료봉들은 철저한 감시를 통하여 재처리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바로 원자로에서 꺼낸 이 핵연료봉들의 처리 문제가 '현재핵'이며, 이 문제가 협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다.

북한측은 핵연료봉이 부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우기고 있으나, 미국측은 당분간 물 속에 저장하였다가 제3국으로

수송하여 보관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생각하기에는 만일 이 핵연료봉들을 다른 나라로 이송하여 보관한다면 그동안 거지말한 것이 들뜬날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까지 샘플조차 줄 수 없다고 우겼으나, 이제는 과연 이 핵연료봉들이 얼마나 연소된 것이고, 또 그동안 북한이 얼마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었는가 백일하에 드러날 형편이니 양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즉 북한측으로 보면 일단 상당한 양의 플루토늄을 포기하는 입장이니,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그것이 관철된다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며, 미국과의 협상에서 이 의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였던 흔적이 보인다.

7. 미래핵

북한이 앞으로도 핵개발에 미련을 두지 못하게 하려면 궁극적으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핵설비들을 해체하여야 한다.

어떻게 하면 북한으로 하여금 앞으로 핵물질을 생산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미래핵' 협상이다.

방법은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봉쇄하는 길이다. 즉 현재 운전중인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원자로 건설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왜 호락호락 이런 시

설들의 가동과 건설을 중지하겠는가?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온 태도를 보면 결코 미래핵을 동결시킬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북한이 선뜻 미국과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려 든 것이다. 그 배경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북한은 현재핵과 미래핵을 담보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경수로 2기를 얻어냈다. 이 점을 우리는 심각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8. 북한과 미국의 핵협상

미국과의 협상 과정을 보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였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실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미국이 협상을 요구하고 있을 때 차라리 이런 시설들을 담보로 경제적인 실익을 얻자는 의도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20여년간 고생해서 만든 설비들을 포기한다는 점에서 이런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이런 시설들을 포기한다면 앞으로 북한로서는 핵무기를 만들어 국제적인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협상에 유리하게 내놓았던 카드를 일거에 포기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모험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추측이 가능하다. 북한이 요구한 사항들을 보면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과 대체 에너지로서 중유를 지원받기를 원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수로 2기의 건설을 요구하였다.

북한이 경수로의 건설 기간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악이용하여 아직 완성하지 못한 핵개발을 완성시키려고 시간을 벌 가능성이 있다.

경수로 협상이 결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다. 경수로형의 선정, 한국이 포함된 기구와의 계약 체결 과정, 건설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입북 문제 등 트집을 잡으려면 얼마든지 꺼리가 많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득을 먼저 취하면서 경수로 건설 과정에서 핵개발을 완성할 때까지 지연시키는 술책일 가능성이 지금까지 북한이 취해 온 태도로 보아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경수로 지원

북한은 경수로 2,000MWe급의 건설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연락사무소 개설까지 관철시켰다.

북한은 남한과의 직접 대화보다는 미국과의 대화를 통하여 그들의 폐쇄적인 문을 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과의 협상 결과

를 보면 상당히 수그러진 태도를 보인다.

북한이 의도한대로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북한의 요구에는 무리한 것이 많으며, 미국은 자국의 손해를 가장 적게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다른 기구가 필요해진 셈이다.

특히 앞으로 북한과의 경수로 계약 체결이라든지 건설을 담당할 주체가 필요해졌으며, 그렇게 구성된 기구가 바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이다.

이 기구의 얼굴은 협상을 담당했던 미국을 내세웠으며, 실질적인 운영은 재원을 가장 많이 부담하게 될 한국과 일본이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경수로 공급 협정의 문제점

북한과 경수로 공급 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기 위해서는 핵심 쟁점의 타결이 가장 중요하다.

북한이 한국의 참여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한 해결되지 못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서 상황을 직시하고 타협의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에 발전소 건설 사업을 가능케 하는 기본 토대가 확보되어

야 한다.

즉 건설 활동에 대한 북한의 행정 지원, 건설 인력에 대한 특별 지위 부여, 영사권 보호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측도 이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급 협정 외에도 여러 가지 부속 협정들이 추가로 체결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서로간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북한도 뚜렷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의 해결 방식, 경수로 건설이 완료된 후 북한 당국이 인허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조치들을 해결하기 위한 북한의 관련 법규 제정 등 제도 정비에서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2. 북·미 제네바 핵합의 1년

95년 10월 21일로 북한과 미국간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를 맺은지 꼭 1년이 지났다.

합의문 골격은 북한이 핵무기 제조에 전용되기 쉬운 흑연 감속 원자로 시설을 동결·해체하고 특별 사찰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측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하여 주고 북·미간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었다.

합의문은 양측이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 사항을 양해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가 1년 동안 진행돼 왔다.

현재까지 북한은 핵시설의 동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95년 6월에는 한국 표준형 경수로를 수용함으로써 합의문의 이행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1년간의 다각적인 협상 과정에서 경수로 건설 이외에 추가적인 요구 사항들을 잇달아 내놓았고, 10월초에는 특별 사찰을 수용한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앞으로 합의문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의 추가 요구에 대해 KEDO의 주요 집행이사국인 한·미·일 3국간에 입장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40억달러의 경수로 건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어렵고, 다만 일반적인 건설 계약의 국제 관행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 푼도 내지 않는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일본은 추가 부담의 규모보다는 오히려 비용 상환에 관심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에 상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3국 사이에 재정 부담을 둘러싸고 계속 불협화음이 생길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북미간의 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조치인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에 관한 협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어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으며, 기본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은 아니지만 북한과 일본

과의 수교 협상이 진행중이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3국의 입장 조절이 서로간의 이해가 얽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본합의문에는 남북 관계의 진전이 분명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남북간의 대화는 아무런 진전이 없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북미 합의 후 1년 동안 합의된 사항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북 경수로 지원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동결 대신 2003년까지 북한에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합의문 작성 후 6개월 이내에 경수로 공급 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참여 정도를 가지고 북한이 시간을 끄는 바람에 6개월은 커녕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공급 협정에 관한 초안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경수로 공급협정이 이렇게 지연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이 경수로 발전소 뿐 아니라, 발전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대 시설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 설비는 모의 운전 작동 장치(시뮬레이터), 송배전 설비, 경수로 건설 예정지인 신포항 부두 시설, 신포항으로부터 발전소까지의 도로 건설 및 핵연료 가공공장 등의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만일 북한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다

건설하려면 약 10억달러가 추가로 요구되는 셈이다. 그러나 KEDO측은 북한의 요구를 거의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이다. 다만 경수로 발전소 부지 조사 및 부지 정지 비용 등 국제 관례상 일괄 도급(턴키 베이스) 방식으로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제공하는 부분만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였다.

나. 북미 관계 개선

제네바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합의문 작성 후 3개월체인 95년 1월 21일 대북 제재 완화 1단계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상대국에서의 신용 카드 사용 허가, 언론 기관의 사무소 개설,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해제 및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 허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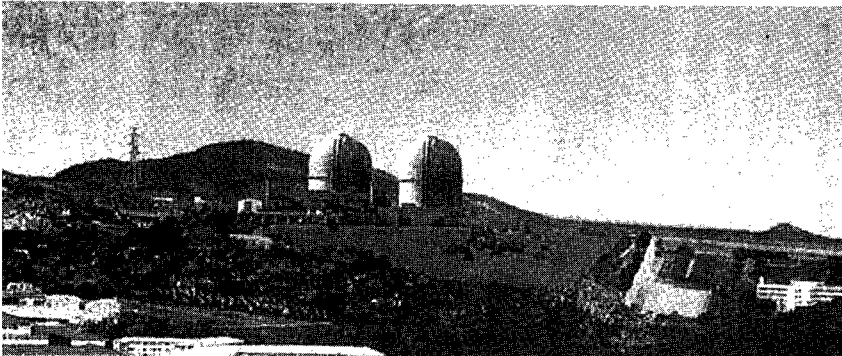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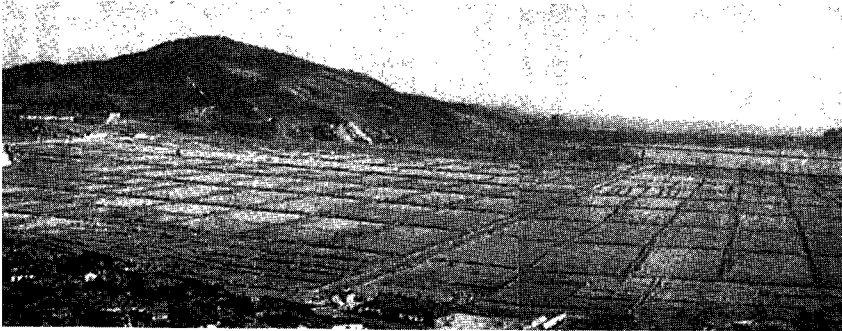
이같은 제재 완화는 미국이 한국전 이후 대북 제재를 실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금까지 가시화된 조치의 한 예로는 95년 4월 10일에 미국과 북한간에 직통 전화가 개설된 점을 들 수 있다.

다. 중유 제공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핵동결을 하는데 따른 대체 에너지로 중유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첫 1년 동안 제공할 중유는 15만톤으로 95년 1월에 5만톤, 8월에 4만톤, 9월에 3만톤, 10월에 3만톤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차년도부터는 경수로 1기가 완성



북한 경수로 건설 예정 부지인 함남 신포 지구의 모습(上)과 컴퓨터그래픽으로 구성한 완공된 원전 모습(下)

되는 2001년까지 매년 50만톤씩의 중유를 제공해야 한다. 당초 중유 제공은 미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유 비용 부담을 꺼리는 미국내 반대 여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중동 산유국 등을 KEDO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라. 핵동결

북한 핵시설의 동결은 제네바 합의 사항 중 가장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는 대목이다.

핵동결은 현재핵과 미래핵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이 제네바 합의 직후인 94년 11월초 핵

동결을 단행한 이후 지속되고 있다.

마. 폐연료봉 처리

북한은 합의전에 가동중이던 원자로에서 8,010개의 폐연료봉을 꺼냈다. 이들 핵연료봉을 재처리한다면 내약 3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제네바 합의는 북한이 원자로에서 꺼낸 핵연료봉의 재처리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원천적으로 재처리를 봉쇄하기 위해 미국은 폐연료봉을 콘크리트 용기내에 건식 보관하기로 동의하였으며, 현재 이런 보관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중이다.

바. 특별 사찰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특별 사찰이다.

특히 한미 양국의 보수파들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큰 문제가 바로 특별 사찰이다.

제네바합의는 특별 사찰의 시기를 '경수로 주요 부품이 인도되기 전'으로 규정하였다.

만일 계획대로 경수로 공급 협정이 체결되고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핵심 부품이 북한에 전달되려면 1999년이 가장 빠른 시기이다.

그 때까지 북한의 과거핵을 규명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진 셈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협상이 지연되면 건설 시작이 늦춰지고 특별 사찰 시기도 그만큼 늦춰진다는 점에서 보수파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사. 남북 대화

제네바 합의문에는 남북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김일성 사망시 남한이 조문을 불허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남북간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다만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위해 쌀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에만 세 차례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남북 당국간 공식 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 합의 이행 전망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진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첫 1년간 상당 부분이 이행돼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앞



으로 북한이 모든 것을 합의대로 이행할 것인가는 결코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처음 1년 동안은 북한이 이행하기 쉬운 점들이 많았던 데 비해, 앞으로는 서로 양보하기 쉽지 않은 쟁점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1년 동안의 합의 이행 내용은 진전이 없는 남북 대화 등 불만스러운 것들이어서 앞으로 미국의 요청이나 종용에 호락호락 따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합의문 그대로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합의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북한과 KEDO는 뉴욕에서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열었으나 경수로 공급 범위와 북한이 요구하는 추가 부담 및 상환 조건 등 민감한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협상이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로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계약을 해 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엉뚱하게 새로운 요구를 제시하고 때를 쓰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고 납득시키느라 시간을 많이 끌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며칠 후에 북한이 이해하고 무리한 요구를 거둬들이는 등 회담에 적극성을 보인 점이다.

북한의 과거핵 의혹을 규명하기 위

한 특별 사찰 문제도 불씨가 남아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강력하게 특별 사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이 점차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북한도 특별 사찰 요구를 무시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한·미간의 마찰이 일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과 미국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경수로 공급에서의 비용 분담 문제 등을 놓고 한국과 미국간에 갈등이 표면화될 것으로 본다.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만해도 전체 비용은 크지 않지만 미국내의 여론이 반대하고 있어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 제네바 합의를 존중하고 그 이행을 기대하는 것은, 북한핵 위협의 영구적인 동결과 경수로를 지원하면서 남북간의 인적 교류, 기술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자연스러운 경제 교류를 통하여 남북간의 관계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남북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통일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이다.

자. 유상 지원? 무상 지원?

북한에 지원하는 경수로가 유상이나 무상이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

북한은 경수로 지원 경비에 대해 언젠가는 상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하게 그들의 상환 조건을 들여다

보면 처음에는 거의 무상을 주장하다가 다시 현물 상환을 주장하였고, 지금은 10년 거치, 30년 분할 상환을 내세웠다. 그러나 결국 3년 거치, 17년 무이자 분할 상환으로 결정되었다.

어느 경우나 북한이 지금은 상환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이런 억지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누가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굳이 북한에 경수로를 공급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묻는다면 답은 명백하다. 아무리 좋게 계산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 여기에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차. 선투자

우리로서는 북한에 40달러를 투자하고 당장은 얻을 수 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투자하지 않을 수도 없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기왕 투자하는 바에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젠가 한반도는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이 된다면 어찌 되었건 북한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통일원에서는 북한과의 수송을 위한 4개의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의 나진·선봉 지역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북한에 건설되는 경수로도 일종의 선투자 개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